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발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01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 복지현장에 필요한 맞춤형정보와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준 주간복지동향 경기도 주간복지동향의 발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주간복지동향은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현안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간복지동향이 도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언해준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 복지관련 뉴스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복지 이슈를 만들어내는 주간복지동향 초기에는 복지 현안에 대한 발 빠른 정보제공과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아야 할 복지 이슈를 만들어 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도 및 시군 정책 동향은 17개 시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한 복지 데이터 분석과 함의를 주고 있으며, 이는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주간복지동향의 내용을 다시 언론을 통해 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복지관련 정책기관으로서 언론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해 있는 복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 연정 및 주민복지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뱅크 역할 기대 첫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여-야 간 연합정치를 통해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지금의 연정체제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도적 복지정책을 소개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기도가 부족한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점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다른 지역의 선도적 복지시책이나 해외 선진사례를 더 소개해 주면 읽는 이에게 더욱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 향후에 발생할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을 계속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2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매일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하는 교수로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신문을 읽지만 신문은 시사성은 높은 반면 깊이 있게 이슈들을 다루어주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G-Welfare Weekly Report”는 신문에서 취할 수 없는 정보로 지식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 지난 일 년간 다양한 주요 사회 문제를 이와 같이 깊이 있게 다루면서 문제별로 정확한 현황, 국가와 지방정책과 세계적 추세, 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매주 힘써준 경기복지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G-Welfare Weekly Report”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경기도 복지정책의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03 김민수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장

- 사회복지 현장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정책, 환경분석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변화하는 환경을 파악하고,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는 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갈급함으로 인해 매주 재단에서 보내주는 Weekly Report는 너무 유익했습니다.
특히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정보, 본질에 충실한 신뢰할만한 내용, 중앙의 정책이 주는 경기도의 시사점 등은 읽어볼수록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 복지계의 핵심가치는 어쩌면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도 Weekly Report가 지식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더욱 가까워서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복지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Weekly Report가 보다 널리 배포되어 현장 곳곳에서 정보가 재 활용되도록 한다면 실무자들에게도 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04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동양 사람들은 ‘본다’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볼 ‘견(見)’이다. 일부러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볼 ‘관(觀)’입니다. 일부러 보려고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꿰뚫어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의 Weekly Report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학자들 나아가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전문가 집단에게 이 시대의 사회복지를 조망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지게끔 도와줍니다.
- Weekly Report를 읽으면서 사회복지의 동향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깨닫게 됩니다.

05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 그동안 주간복지동향은 복지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 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복지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자 해외동향도 담고 있습니다.
- 짧은 분량의 리포트 이지만 여러 분야에 계신 독자 분들께 유의미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 발전의 밑바탕이 되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정책(가칭 청년내일공제) 추진

01 주요 내용

-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 정책을 '16년 7월 1일부터 추진
 -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자산형성의 촉진을 실현하기 지원하기 위한 정책
 - 청년근로자(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2년 근무시 만기공제금 총 1,200만원+이자를 지급
 - 기존의 청년인턴제의 문제점 개선 및 지원방식의 전환을 통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 증진, ‘근로청년’이라는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정책의 집중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청년취업내일공제의 주요 정책대상은 중소기업 정규직,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110% 이상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다양한 청년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
 - 청년취업내일공제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장기근속장려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내재
 - 또한, 청년취업내일공제의 기업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정규직 전환자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청년 근로자 외 매칭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대상 확대시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경기도는 이에 앞서 근로 청년계층의 자산형성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한 청년계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 중임
 - 청년통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으나, 내일공제는 인턴을 거친 정규직에 한정하고 있고,
 - 청년통장은 3년간 근로 유지의무이나 이직가능하며 근로의욕 고취가 목적이고 내일공제는 2년간 해당 중소기업 근무하는 장기근속장려에 초점을 둠

구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취업내일공제
목적	• 근로의지 및 취업의지 고취 • 도내 3D업종 기업 인력 수급 원활	• 중소기업 취업 • 장기근속 유도(촉진)
유지 기간	• 3년(36개월)	• 2년(24개월)
대상	• 경기도 내 거주 • 근로활동 중인 만 18세 ~ 만34세	• 중소기업 근로청년 만 15세~만34세 (청년인턴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자)
규모	• 500명 / 3,096백만원	• 10,000명 / 990억
근로소득 및 자격기준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이하 (1인/월 130만원 이하) • 3D 등 소득공제율(10%~30% 차등 적용)	• 최저임금 110% 이상
지원 내용	• 본인 360만원 + 도비 360만원 + 민간후원금 259만원 + 이자 ≒ 1,000만원	• 본인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국비(정부) 600만원 + 이자 = 1,200만원 + 이자
자격 충족 요건	• 3년간 근로 유지시 전액 지원 (단 기업체 폐업 질병 부상 등은 예외 조항 적용)	• 2년간 근속
도입	• 신청 접수('16.3.21~4.1) • 1차 적립금 시행('16.5.25)	• '16년 7월(예정)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청년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자산형성 지원 정책 추진
 - 청년계층의 소득 수준을 적극 고려하여 단계별로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 소득 수준, 근로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별맞춤형 자산형성 정책 발굴 및 연계 체계 구축
 - 중앙정부 사업에 부합하면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청년취업내일공제’ 정책 개발 추진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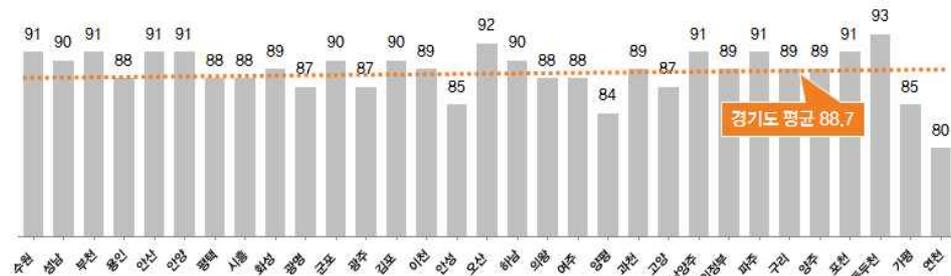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역별 신청 현황

이달 본격 시행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결과, 도시화를 및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성별이 여성 일수록 대상자 선정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

- 도내 근로 청년계층 자산형성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달 본격 시행에 돌입
 - '16년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결과 500명 모집에 총 3,300여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은 6:1을 초과
- 올해 시범사업 신청현황 분석 결과,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시군일수록 정책수요도 높았음
 - 참여 신청이 많았던 수원·안산·고양·성남·부천 지역은 청년인구 비중이 경기도 평균(19.7%) 보다 높은 곳임 : 수원(22.0%), 성남(20.3%), 안산(22.8%), 고양(20.7%), 부천(21.3%)



- 참여자 선정 평가에서 경기도 기준 점수는 88.7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동두천 93 점, 연천 80점 등 지역별 편차 존재
 -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동두천·오산 등 19곳이며, 연천·양평·안성·가평 등 12곳은 기준점수가 평균보다 낮음
 - 선정 평가 결과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



- 성별로는 기준 점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신청 비율이 높게 분포
 - 지역별 신청자의 여성·남성의 비율은 수원(55:45), 성남(62:38), 부천(53:47), 안양(55:45), 남양주(56:44), 동두천(55:45) 등으로, 기준 점수가 높은 지역에서 여성신청자 비율도 높게 분포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 체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5.21.(토) 14:00~16:0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 • 참 석 : 청년통장 선정자 500명 및 사업관계자 50여명 등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267-9334

03 FACT CHECK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해결책은?

-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을 고려한 제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1%수준(연합뉴스, '16.05.11.)
-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들의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괜찮은 일자리' 만 선호하는 것이 아닌 구직자와 기업 간의 현저한 임금격차가 가장 큰 원인
 - 2016년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3,893만원으로 중소기업 2,455만원의 1.6배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복리후생과 근로연계 지원제도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잦은 이직을 유발
 - 취업자 20%가 '1년 계약직' 출발하며 20~29살 비정규직 32%를 차지, 근속기간도 18.8개월이며, 이직자 절반은 '근로여건의 불만' 을 제기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의 일자리 질 향상과 임금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 대기업의 높은 초임은 좋은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이나, 전체적인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킴
 -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함
-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산업·기업 간 수익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을 지향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 산업 부문의 희생과 양보가 전제되어 있는 제도로, 동일업종 내 저임금 근로자를 줄이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왔음
- 비합리적인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의 변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 중앙일보, 2016.03.08. 기사
-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3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04 통계로 보는 복지

되돌아보는 주간복지동향의 1년



- 2015년 5월 13일 제 1호를 발간한 이래로 지난 1년간 주간복지동향의 기사 244건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소득/일자리 관련 기사가 54건으로 전체의 1/4을 차지
 - 복지재정과 전달체계 등 행정 분야 기사가 3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등으로 보건·의료관련 현안도 24건이었음
- 대상별로는 노인 연령기준 상향 등 노인관련 기사가 33건이었으며, 아동은 11건으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짐
 - 청년 정책에 대한 기사는 8회 등장하여 횟수는 많지 않지만, 점점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1인 가구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정책 대상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